

지방자치단체장 여성후보 공천 의무화 제도 (광역 20%, 시·구 30%, 군 20%) 도입

수행과제명 : 기초의회 여성의원 증가에 따른 남녀의원 의정활동 변화에 관한 연구

과제책임자 : 김원홍 연구위원

Tel: 02-3156-7101, e-mail: kwh56@kwidimail.re.kr

요 약

2010년 지방선거를 맞아 생활정치를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 여성참여 확대는 필수적이다. 전 세계가 함께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을 위하여도 보다 많은 여성자치단체장이 나올 경우 보다 지역발전과 지역균형을 보다 바람직하게 보임. 현재 우리나라 여성지방자치단체장은 광역자치단체장 0명(0%), 기초자치단체장 5명(2.2%)으로 저조한 실정임. 2009년 12월 29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010 6월 지방선거부터 광역 또는 기초의원 선거에서 각 정당별로 국회의원 선거구마다 여성을 1명 이상 의무적으로 공천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과 정당법 개정안을 의결하였고,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장 공천할당제는 없는 형편임. 2010년 지방선거를 맞아 지방자치단체장 여성후보 공천 의무화 제도(광역 20%, 시, 구 30%, 군 20%) 도입하도록 함

1. 정책의 목적 및 필요성

- ☐ 지방화시대를 맞아 생활정치를 기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장에 여성참여 확대는 필수적이다. 전 세계가 함께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을 위하여도 보다 많은 여성자치단체장이 나올 경우 보다 지역발전과 지역균형을 보다 바람직하게 보임
- ☐ 그간 여성구청장이 있는 송파구청장이 이루어온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음. 여성친화도로조성, 생리기간 중 수영장여성이용료 할인, 아

토피없는 어린이집, 주차장내 여성우선주차구획, 여성전용주차장 핑크존, 이용시간 및 이용자 수를 고려한 화장실건립과, 1동 1공공시설확충 및 안전도시구축 중 특별히 어머니들의 관심사인 어린이안전정책추진 등을 통해 일하는 여성을 위한 지원정책을 펼쳤고, 여성이 건강해야 사회가 건강하다는 기본인식하에 산전산후 건강교실, 여성사랑맞춤형 건강관리, 중년기 여성건강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송파여성능력개발센터를 통해 취업과 창업을 연결하는 200여개의 전문직업프로그램과 여성지도자육성프로그램을 통해 여성능력개발 및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있는 점 등이 평가되어 2008년 『여성지위향상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 여성과 관련된 leading city 역할을 해 내고 있음

- 2009년 현재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광역자치단체장 0명(0.0%), 기초자치단체장 5명(2.2%: 김영순 송파구청장, 박승숙 인천중구청장, 윤순영 대구중구청장, 김은숙 부산중구청장, 이청 전라남도 장성군수)가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장 여성후보 공천할당제의 도입이 필요함
- 2006년 지방선거에서 광역자치단체장 여성후보 5명, 기초자치단체장 여성후보 23명이 나왔음. 2006년도 지방자치단체장에 여성후보가 과거에 비하여 늘어난 것은 지방자치가 생활정치로 정착되어 가면서 여성후보들도 자치단체장에 보다 많이 도전한데서 비롯된 것임. 당시 당선된 3명의 여성자치단체장의 경우도 모두 한나라당 우세지역에서 당선된 사람들로 향후 여성자치단체장 확대를 위한 전략의 모색이 필요함
- 현재 2009년 12월 29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010 6월 지방선거부터 광역 또는 기초의원 선거에서 각 정당별로 국회의원 선거구마다 여성을 1명 이상 의무적으로 공천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과 정당법 개정안을 의결하였고,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장 공천할당제는 없는 형편임. 2010년 6월 지방선거를 맞아 지방자치단체장 여성후보 공천할당제 도입이 요구됨

2. 정책의 추진방향

□ 지방자치단체장 여성후보 공천 의무화 제도(광역 20%, 구·시 30%, 군 20%) 도입

- 2010년 6월 지방선거를 대비하여 시도 자치단체장 여성후보 20%, 구·시 30%, 군 20% 여성후보 공천할당제 의무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요구됨, 서울의 경우를 예로 하여 살펴볼 경우 권역별로 ①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②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 ③ 동작구, 서초구, 강남구, ④ 광진구, 송파구, 강동구, ⑤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⑥ 종로구, 성북구, 중구, 용산구, ⑦ 성동구, 동대문구, 중랑구, ⑧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로 나누어 이중 1지역은 여성후보를 의무적으로 공천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함.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2006년 지방선거를 맞아 인구 50만 미만의 도시지역에 여성자치단체장 공천할 것을 제안한 적이 있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여성후보를 발굴하는 방법이 필요함

□ 공천심사위원회에 일정비율 여성참여 의무화 제도 도입

- 공천심사위원회에 일정 비율 여성위원의 참여를 의무화하여 공천과정에서 여성의 대표성을 확보해주는 조치가 필요함. 그간 우리나라의 정당에서 구성한 공천심사위원회의 경우 대부분이 남성 주요 당직자로 구성되어 왔음. 단지, 16대 총선이후 여성의 일부를 공천심사위원으로 하고 있는데,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의 경우 11명중 공천심사위원중 4명(36.3%), 통합민주당은 12명의 공천심사위원중 0명(0%)이었음. 따라서 정당들은 앞으로 공천과정의 투명성 확보 및 여성이 배제되지 않도록 공천심사위원회에 일정비율 여성위원 참여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함

□ 여성정치인의 지속적인 육성 및 발굴 시스템 구축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는 4월 9일 18대 총선이후 4월 19-23일까지 만 19세 이상의 남녀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여성후보가 출마한 지역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정치의식을 조사하였음. 그 결과 유권자들은 여성후보가 출마한 의미에 대하여 “남녀평등에 기여했다고 생각한다”가 38.7%로 가장 많이 나타났음. 그런데, 주요 정당들의 여성후보 공천이 낮은 이유에 대해 “정당들의 여성후보 발굴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 때문에”가 41.0%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아울러, “바람직한 여성국회의원 비율”은 “지금보다 증가해야 한다”가 62.1%로 가장 높았음. 여성국회의원 증가 방안으로는 “능력 있는 여성정치인 육성”이 61.8%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이처럼 유권자들은 정당의 역할로 “여성정치인 육성” 및 “여성정치인 발굴”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음. 그간 정당들은 비례대표제 여성할당제를 도입했다는 명목하에 여성후보 육성 및 발굴이 소극적이었음. 이와 관련하여 정당들은 당차원에서 여성능력개발을 위한 여성정치학교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여성정치 네트워크를 만들어 인적 풀을 확장해야 할 것임

3. 정책효과

□ 여성지방자치단체장 확대

- 2009년 3월 9일 기획재정부와 통계청 등에 따르면 유엔개발계획(UNDP)이 전 세계 100여 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2008년 여성권한척도(GEM: Gender Empowerment Measure) 지수에서 한국은 0.54를 기록해 지난해(64위)보다 4계단 떨어진 68위에 머물렀음. 여성지방자치단체장 확대를 통해 여성권한척도를 높일수 있음

- 여성친화적인 지방정책의 활성화를 통한 지방정치의 발전을 기함
 - 2010년 지방선거를 맞아 생활정치를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 여성참여 확대는 필수적임. 전 세계가 함께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을 위하여도 보다 많은 여성자치단체장이 나올 경우 보다 지역발전과 지역균형을 보다 바람직하게 보임

▶ 주관부처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주요 정당(한나라당, 민주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성부(정책총괄과) 등

▶ 관계부처 : 선거관리위원회 정당과
